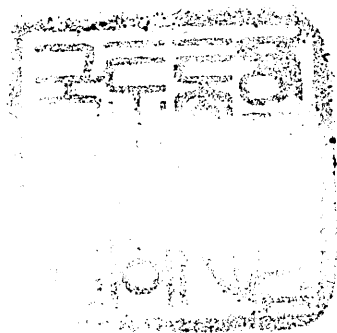


북한 GNP推計方法 解説

趙明均(行政事務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北韓의 GNP는 當院을 비롯한 國內外 여러 機關에서 推計되어 北韓의 經濟分野는 물론 各 分野 研究의 基礎資料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北韓 GNP推計結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疑問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冊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北韓의 國民所得概念과 GNP推計方法에 대한 理解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北韓經濟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助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988년 6월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長 崔 文 鉉

目 次

◇ 要 約 文	1
1. 머 리 말	6
2. 西方의 國民所得 概念	8
가. GNP의 概念과 測定方法	8
나. GNP와 關聯된 概念	10
다. GNP의 限界	13
3. 北韓經濟의 循環構造와 國民所得 概念	15
가. 北韓經濟의 特徵	15
나. 北韓經濟의 循環構造	17
다. 北韓의 國民所得 概念	21
(1) 社會總生産(GSP)	21
(2) 國民所得(NI)	23
라. GNP와의 差異點 및 調整問題	26
(1) GNP와의 差異點	26
(2) 國民所得概念간의 調整	27
4. 北韓의 GNP推計方法	30
가. 推計結果 比較	30
나. 推計方法 比較	33
(1) 國土統一院의 推計方法	33
(2) 美國 中央情報局(USCIA)의 推計方法	36
(3) 스톡홀름國際平和研究所(SIPRI)의 推計方法	37
(4) 英國 國際戰略問題研究所(IISS)의 推計方法	38
다. 北韓의 GNP推計에 따르는 問題點	40
5. 맺 는 말	45
◇ 註	48
◇ 參考資料	51

要 約 文

1 . 머 리 말

- 南北韓을 비롯한 대부분의 저개발국가에서 基本課題가 되어 온 近代化는 國民所得 또는 1人當國民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로 표현되는 經濟成長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
- 國民所得을 나타내 주는 가장 대표적인 指標로는 國民總生產(GNP)을 들 수 있으며, 南北韓의 近代化 추진 정도를 比較할 때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도 GNP 또는 1인당 GNP임.

2 . 西方의 國民所得概念

- “國民經濟가 1년간 새로이 생산한 財貨와 用役을 市場價格으로 評價하여 合算한 것”으로 定義되는 GNP는 1년동안 생산된 모든 財貨와 用役(總產出)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中間財(中間投入費)를 제함으로써 구해짐.
- GNP는 “總計”, “國民”(National)概念이라는 점에서 다른 國民所得 指標인 國民純生產(NNP), 國內總生產(GDP)과 구별되며, 1년간 所得의 “흐름”(Flow)을 나타내 주는 概念이라는 점에서 特定時點의 “累積殘量”(Stock)을 나타내 주는 國富, 國力, 外債 등과 구별됨.
- GNP가 한 나라의 경제를 巨視的으로 分析하는데 가장 유용한 手段이긴 하나, 市場化 程度와 物價變動의 影響을 크게 받고, 分配의 衡

주이나 福祉 등 經濟의 質的인 側面을 나타내 주지 못한다는 限界를 갖고 있음.

3 . 北韓經濟의 循環構造와 國民所得概念

- GNP 概念을 염두에 두고 資本主義經濟와 비교해서 볼 때, 北韓經濟는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 物的 生産部門과 非生産部門의 區分, 需要超過의 供給制約的 經濟, 計劃價格과 複式換率制度 등의 特徵을 갖고 있음.
- 北韓經濟의 循環構造는 計劃作成→商品生産과 處分→所得의 分配와 處分 그리고 對外部門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철저한 國家計劃에 의해 이루어지고, 域內經濟와 對外部門間의 連繫가 거의 없다는 점이 特徵임.
- 北韓의 國民所得 指標로는 社會總生産(GSP)과 國民所得(NI)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國民所得임. 北韓概念의 國民所得은 非生産的 서어비스部門이 제외되어 있는 반면 間接稅에 해당하는 去來收入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西方概念의 狹義의 國民所得과 차이가 남.
- 北韓概念의 國民所得과 GNP 間의 關係를 算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北韓概念 國民所得 + 非生産部門 = 國內純生産 (NDP)

NDP + 海外純受取要素所得 = 國民純生産 (NNP)

國民純生産 + 固定資本消耗充當金 = 國民總生産 (GNP)

4. 北韓의 GNP 推計方法

- 지금까지 北韓의 GNP를 推計, 發表해 온 대표적인 國內의 기관으로는 國土統一院을 비롯, 美國의 中央情報局과 軍備管理軍縮局(ACDA), 英國의 國際戰略問題研究所(IISS), 스웨덴의 스톡홀름國際平和研究所(SIPRI) 등이 있으며, 그밖에 國內外 學者, 關係專門家들에 의해서도 北韓의 GNP 推計가 시도된 바 있음.
- 國內外 各 機關의 北韓 GNP 推計는 발표된 額面만을 놓고 볼 때 크게 차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美國의 中央情報局과 ACDA의 推計值가 가장 높으며, 國土統一院의 推計值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北韓의 GNP 推計結果 比較

國土統一院 : 100

年 度	國土統一院	美國 CIA	ACDA	SIPRI	IISS
1980 年	100	144	133	106	99
1981	100	158	146	108	120
1982	100	163	151	112	115
1983	100	155	143	111	121
1984	100	156	-	133	127

-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原因은 무엇보다 北韓의 GNP를 美달러貨 表示로 환산하는데 사용하는 換率適用方法이 서로 다르고, 北韓經濟의 循環構造, 國民所得概念을 理解하는 視角과 北韓의 公式發表值에 대한 評價에서 差異가 나기 때문임.

○ 各機關의 北韓 GNP 推計方法 比較

推計要素	國土統一院	美國 CIA, ACDA	SIPRI, IISS
推計根據	북한발표치, 소련 발표치, 자체평가치	北韓 發表值	北韓 發表值
北韓發表值 評價	다른 경로로 입수된 자료와 檢證	그대로 인용 일부 자체 추계	그대로 인용
北韓概念國民所得 /GNP	90 % 수준	85 % 수준	—
非生産部門 /GNP	7 % 수준	10 % 수준	—
財政規模 /GNP	75 % 수준	60 ~ 70 % 수준 (ACDA)	65 % 수준
軍事費 /GNP	22 % 수준	17 ~ 19 % 수준 (ACDA)	10 % 수준
GNP 成長率	自體 回歸分析 추정치	北韓發表 國民所得 成長率. 自體 추정치	北韓發表 재정 규모 증가율
換 率	각년도 商業換率	물가지수로 조정 한 1984년(ACDA 1982年) 商業換率	1980년도 商業換率 • SIPRI 1\$: 1.79 북한원 • IISS 1\$: 2.05 북한원

- 國土統一院의 推計值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기관에 비해 북한 개념 국민소득 /GNP, 財政規模 /GNP 비율이 높은 반면 자체 추정 GNP 成長率이 낮고, 換率適用方法이 다르기 때문임.
- 美國 CIA의 推計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物價指數로 조정하는 換率適用方法에 기인함.
- IISS는 상업환율외에 北韓이 주장하는 公式換率 (1\$: 0.94 북한원)을 적용, 北韓 GNP를 1984년 399.7억 \$, 1985년 424.5억 \$로도 발표하고 있음.

5. 맺는 말

- 北韓의 GNP推計에 따르는 問題點은 北韓이 經濟統計資料를 公開하지 않는 한 解決되기 어려우나
 - 北韓經濟研究의 底邊을 擴大하여 새로운 視角과 接近方法을 導入하고
 - 巨視的인 GNP推計와 北韓經濟의 制度的 側面研究, 微視的인 分析間의 聯關性을 높임으로써 그 妥當性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5:1의 南北韓 GNP隔差, GNP가 갖고 있는 限界 등을 고려할 때, 向後 北韓經濟研究는 물론 南北韓 經濟力 比較는 GNP推計와 같은 量的인 分析과 함께 質的인 分析을 竝行하는 쪽으로 그 研究方向이 轉換될 必要가 있음.
- 北韓의 GNP推計值를 이용하는 立場에서도 발표된 數值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結果가 나오게 된 背景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한편 GNP나 1인당 GNP가 한 나라의 經濟力은 물론 國力을 나타내 주는 전부가 아님을 염두에 두고 利用하여야 할 것임.

1. 머리말

해방후 40년간 남북한은 각기 다른 경제체제하에서 近代化를 추구해 왔다. 대부분의 低開發國家가 기본과제로 삼아 온 근대화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각 나라마다 그 추진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바탕을 經濟成長에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國民所得 또는 그것을 인구수로 나눈 1人當國民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로 표현된다. 다시말해 한나라의 경제활동의 성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국민소득이며, 그 증가율은 바로 경제성장율을 의미한다.

이같은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 : GNP)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의 경제활동 측정은 물론 국가간의 비교에도 GNP가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근대화 추진 정도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도 GNP 또는 1인당 GNP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는 매년 북한의 GNP를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南北韓 體制競爭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統一指向의 次元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각 기관이 추계한 북한의 GNP는 과연 어느 것이 북한경제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가 보아도 얼른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GNP 추계가 각 추계기관마다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경제활동을 평가하는데 이용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폐쇄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체제를 달리하는 두 경제를 불충분한 자료의 제약 속에서 그나마 한쪽의 지표를 이용, 평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경제학이나 통계학적 견지에서 볼 때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

서든지 북한의 경제를 평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분단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이며,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데 GNP를 대신할 만한 더 유용한 도구가 없는 것 또한 경제학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각 기관의 北韓 GNP推計方法 비교를 통해 그 결과가 차이 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아울러 北韓經濟의 循環構造 및 國民所得概念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그런데 북한의 GNP 추계에 대해 갖는 의문은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GNP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개념들과 혼동하는 데서 오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북한의 국민소득개념과 GNP 추계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지식으로 자본주의경제의 GNP 개념을 살펴본 다음, 북한경제의 순환구조와 국민소득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의 북한 GNP 추계에 대해 그 추계방법과 결과를 비교하는 순서로 쓰여졌다.

2. 西方의 國民所得概念

국민소득을 나타내주는 지표로는 자본주의의 경우 GNP 외에 國民純生産 (Net National Product : NNP), 狹義의 國民所得 (National Income : NI), 國內總生産 (Gross Domestic Product : GDP)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GNP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본주의경제의 국민소득을 일단 GNP로 한정시켜 설명하기로 한다. 이 GNP에 대칭되는 것으로 北韓에는 社會總生産 (Gross Social Product : GSP) 과 國民所得 (NI) 이 있다.

가. GNP의 概念과 測定方法

GNP의 概念

GNP는 “ 국민경제가 일정기간 (보통 1년) 중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 ” 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國民經濟란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서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사고 팔기위해 시장을 매개체로 연결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국민경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 또는 각 경제주체가 받은 소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소득통계라고 하며, 그중 하나가 GNP인 것이다.

GNP의 測定方法

GNP를 측정하는 데는 각 기업이 1년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다 더한 것 (總產出) 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중간재 (中間投入費) 를 빼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 10의 밀을 원료로 해서 시장가격 20의 밀가루를 생산하고 또 이 밀가

루를 원료로 30의 빵을 생산했다고 할 때, GNP는 60(=10+20+30)이 아니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30(=10+20)을 총산출 60에서 공제한 30(=10+10+10)이 된다.

말하자면 GNP는 총산출에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것, 즉 附加價値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名目 GNP 와 實質 GNP

GNP 측정에서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 GNP 측정에 있어서 시장 가격은 그 해의 시장가격(經常價格)과 특정시점의 시장가격(不變價格) 두가지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해의 시장가격을 가지고 측정된 GNP를 名目 GNP라고 부르며, 특정시점(기준년도라고 부른다)의 시장가격으로 측정된 GNP를 實質 GNP라고 부른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GNP를 측정하는 까닭은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목 GNP는 국민소득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되며, 한나라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는 실질 GNP가 사용된다. 그리고 1人當 GNP는 명목 GNP를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와같이 GNP 측정은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결정하고 거래를 매개하는 시장과 여기서 결정된 가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國民所得 三面等價의 原則

한편 경제학자들은 국민경제의 흐름을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여 GNP를 측정하고 있다. 각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附加價値를 전부 더함으로써 측정하는 生産國民所得, 각 주체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것을 전부 더하여 측정하는 支出國民所得, 이러한 거래의 결과 각 생산요소가 받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등을 다 더하여 얻는 分配國民所得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측정된 국민소득은 경제이론

상으로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데 이를 國民所得 三面等價의 原則이라고 부른다.

新國民計定 體系 (新 SNA)

각국에서 GNP를 실제로 측정하는 데는 UN이 만든 國民所得 編制指針을 따르게 된다. UN통계국은 국민소득의 올바른 추계와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민소득의 측정방법, 측정대상과 그 범위등을 통일한 “國民計定體系와 그 附表”(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SNA)를 1953년에 제정하였으며, 그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68년에는 新SNA를 제정, 각국에 이를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통계처리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6년부터 新SNA를 채택하고 있다.¹⁾

나. GNP와 關聯된 概念

북한의 GNP추계결과에 관한 의문은 많은 경우 다른 국민소득개념 또는 國富, 國方 등과 GNP개념을 혼동하는데서 일어나고 있다.

國民所得의 여러가지 概念

국민소득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GNP외에도 여러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GNP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國內總生産(GDP)이 있다. 다음 純計개념의 부가가치 합계인 國民純生産(NNP)이 있다. 그 밖에 국민순생산을 분배면에서 본 협의의 國民所得(NI), 국민의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個人所得(Personal Income: PI) 그리고 개인이 실제로 받고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個人可處分所得(Personal Disposable Income: PDI)등도 국민소득을 나타내 주는 개념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GNP 와 자주 혼동되는 것은 GDP 와 NNP 그리고 협의의 국민소득인 NI 이다.

國內總生産 (GDP)

GNP 와 GDP 의 차이는 용어 자체가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GNP 는 “사람” 을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대해 GDP 는 “영토” 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외국에서 일하여 벌은 소득이 GNP 에는 포함되지만 GDP 에는 제외되며,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여 벌은 소득이 GNP 에는 제외되지만 GDP 에는 포함된다.

이러한 관계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GDP +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 = GNP$$

國民純生産 (NNP)

한편 GNP 와 NNP 는 전자가 총계개념인 반면 후자는 순계개념이란 점에서 구분된다. GNP 측정에는 기존의 생산시설, 건물 등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즉, 固定資本消耗充當金까지도 당해년도의 부가 가치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뺀 純附加價値의 합계가 NNP 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주는 것은 NNP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NP 측정의 문제점은 자본소모분의 측정이 곤란하다는 데에 있다. 현실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企業計定上의 減價償却費는 사전에 일정 비율을 반영시킨 것으로 실제의 자본소모분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²⁾

狹義의 國民所得 (NI)

협의의 국민소득은 국민순생산에서 間接稅를 빼고 정부의 補助金을 더함으로써 구해진다. 여기서 간접세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며,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비용의 일부를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준 것을 말한다. 따라서 市場價格에는 상품생산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간접세가 더해져 있는 대신 보조금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장가격에서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를 빼면 이는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생산요소에 대한 댓가가 된다. 다시 말해 협의의 국민소득이란 要素費用으로 측정된 국민순생산을 분배면에서 본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1년간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뜻한다.

國富와 國力

국민소득과 관련된 개념들 외에 GNP와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國富, 國力 등과 같은 개념이 있다.

國富는 특정시점에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존재량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 기계설비, 주택, 지하자원 등 국내의 실물자산과 외국에 대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일정기간에 새로이 생산된 것을 나타내는 GNP는 과거의 축적을 나타내는 국부에 새로이 첨가된 부분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국부가 累積殘量(stock) 개념인데 대해서 GNP는 생산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flow) 개념이라고 한다. 따라서 GNP의 크기와 국부의 크기는 대부분 서로 비례하지만 GNP의 격차가 國富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간 비교를 할 때 國力이란 개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國力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내용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國富는 물론 인구, GNP, 군사력, 정치제도화 수준, 국민의지 등이 국력평가의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을 비교할 때 GNP가 우선 떠오르는 것은 국력을 나타낼만한 객관적인 다른 지표가 없고, 다른 요소들이 결국은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外 債

이밖에 GNP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GNP와 外債와의 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종종 GNP와 외채규모가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채는 특정시점에 한 나라가 외국에 대해 지고 있는 債務의 累積殘量인데 대해 GNP는 그 계산과정에서 이미 외채의 元利金償還을 빼고 측정된 것이므로 GNP와 외채는 직접 관련이 있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외채가 GNP 규모에 비해 많고 적음이 그 나라의 경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GNP에서 외채총액이나 원리금상환을 빼면 실제의 경제성장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GNP의 限界

GNP가 널리 사용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을 비유해서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드 보울딩(Kenneth Boulding)은 GNP를 20세기 최대의 발명의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활동을 GNP를 이용,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GNP 자체가 그 측정방법상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GNP는 市場을 중심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의 市場化程度가 클수록 그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시장이 없는 원시적인 자급자족경제의 경우 GNP는 0이 된다. 그리고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 시장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GNP 격차는 실제보다도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차이는 심한 경우 3배 가까이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名目 GNP는 물가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와 똑같은 양의 생산을 했어도 物價가 2배로 뛰면 명목GNP는 2배가 된다. 그리고 똑같은 상품이 A국에서 10\$인데 B국에서는 30\$이라면 그만큼 B국의 GNP가 실질이든 명목이든 A국보다 높게 측정된다.

셋째, GNP 또는 1인당 GNP가 바로 그 나라의 生活水準이나 分配狀態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 GNP는 총계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3개의

경제주체의 소득이 A 20, B 30, C 100인 경우나 A, B, C 모두 50인 경우나 GNP는 150으로 같다. 그리고 1인당 GNP도 명목GNP를 인구수로 나눈 평균개념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실제로 받는 소득과는 차이가 난다. 또한 물가수준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생활수준과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네째, GN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자연의 아름다움, 여가 등은 물론 經濟成長의 弊害인 환경파괴, 공해, 도시문제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같은 GNP의 한계때문에 GNP로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파악하려는 것은 사람을 身長만 보고 판단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물론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거의 GNP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GNP보다 더 유용한 분석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3. 北韓經濟의 循環構造와 國民所得 概念

가. 北韓經濟의 特徵

GNP 개념과 측정방법이 자본주의의 경제순환 원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듯이 북한의 국민소득개념 또한 그들의 경제순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민소득개념 내지는 GNP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北韓經濟의 特徵 및 循環構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북한경제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경제의 순환이 원칙적으로 市場을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대해 북한의 경우 이같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그 역할을 國家計劃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⁹⁾ 따라서 자본주의경제를 다른 표현으로 市場經濟 (Market Economy) 라고 부르는데 대해 사회주의경제는 非市場經濟 (Non-market Economy) 또는 計劃經濟 (Planned Economy) 라고 부르며, 특히 북한처럼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라고 부른다.⁴⁰⁾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

두번째 북한경제의 특징으로는 자본주의경제가 모든 재산의 私有制度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的 所有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소유형태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인 국가적 소유와 협동조합적 소유 그리고 개인적 소유로 구분되며,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소유형태는 북한경제 순환구조의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 거래에 따라 소유형태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서는 어느 소유형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격결정은 물론 거래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物質的 生産部門과 非生産部門

세번째 북한경제의 특징은 경제활동을 物質的 生産部門과 非生産部門으로 구분하고, 국민소득은 물질적 생산부문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고 보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경제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마르크스의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에 근거를 둔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價値論에서 가치는 생산적 노동에 의해서만 창조되며, 여기서 생산적 노동이란 물질부문의 생산에 투입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비생산부문에는 자본주의경제에서 말하는 서비스부문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민소득개념을 설명하는 곳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需要超過의 供給制約的 經濟

네번째 북한경제의 특징은 자본주의국가들이 供給超過에 따른 需要制約的 經濟인데 반해 需要超過의 供給制約的 經濟라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생필품의 경우 특히 더하다. 이처럼 북한에서 공급이 수요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국방 및 중공업 우선정책 등에 따른 자원배분의 제약은 물론 계획경제의 獨占的 經濟構造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까닭에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국가와 같이 상품을 팔기 위한 廣告를 찾아볼 수 없다.

計劃價格과 複式換率

또 하나 북한경제의 특징은 국민소득 측정의 대상인 상품가격이 국가 계획기관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計劃價格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북한에서 상품가격은 그 使用價値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5인가족의 한달 평균 주거비가 북한화폐단위

로 4.2 원인데 비해 신사기성복은 150~300 원이나 한다.⁵⁾ 이같은 계획 가격의 특징은 換率 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서방과는 달리 商業換率과 公式換率로 된 複式換率制度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공식환율은 실제 구매력이나 화폐교환비율과 관계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화폐를 평가한 것이다. 1984년의 경우 북한원화의 對달러 상업환율은 1 \$: 2.36 북한원인데 비해 공식환율은 1 \$: 0.94 북한원으로 그 차이가 2배가 넘는다.

나. 北韓經濟의 循環構造

국민소득개념을 염두에 두었을 때 국민경제의 순환은 상품생산과 유통, 소득의 분배와 처분, 그리고 외국과의 거래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경제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計劃作成이 경제순환의 중요한 고리로 추가된다.

計劃 作成

북한에서 경제계획은 展望計劃과 現行計劃으로 구분되어 작성된다. 여기서 전망계획은 2년 이상의 중·장기간에 걸친 경제계획을 말하며, 1년 미만의 연도별, 분기별, 월별 계획은 현행계획에 포함된다. 즉, 현행 계획은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國家豫算 형태로 작성된다.

계획작성은 다음 세 단계를 거쳐 확정, 집행된다.

첫째 단계는 黨이 대략적인 통계수치를 계획작성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각급 경제관리기관 및 기업소에서 당이 제시한 통계수치를 토대로 計劃草案을 作成하고, 그것을 각 중앙부서가 종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國家計劃委員會는 이 초안들을 종합, 경제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內閣(政務院)의 심의에 제출한다.

세제 단계는 최고국가기관에서 경제계획 초안을 批准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현행계획 즉, 國家豫算은 내각에서 비준한 후 효력을 발생하며, 3차 7개년계획과 같은 展望計劃은 내각의 심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거쳐 법령으로 발표된다.

북한에서도 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다. 북한이 매년 4월경 최고인민회의를 소집, 국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사후 추인절차에 불과하다.

商品生産과 流通

북한경제에서 상품생산과 유통은 철저한 國家計劃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기업소와 협동농장에서는 할당된 계획지표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며, 이 상품들은 국가계획에 의해 국가기업소, 협동조합, 개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에서 각 거래형태별로 적용되는 거래방법과 가격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중에서 生産財는 다른 국가기업소나 협동조합간에 계약 형태로 거래되며, 소비재는 국가상점을 통해 수요자에게 판매된다. 이때 생산재는 기업소의 원가에 이윤을 더한 企業都賣價格으로, 消費財는 기업도매가격에 去來收入金을 더한 産業都賣價格으로 거래되며, 일반주민들은 産業都賣價格에다 상점의 유통비(수송비, 포장비, 인건비를 포함한 것)와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다.

이중에서 국가기업소간의 거래는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은행구좌를 이용한 비현금결제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거래의 편의보다는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協同農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음 두가지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국가계획으로 정해진 분량은 국가가 결정한 가격으로(계획수매), 계획초과 생산물이나 기타 농산물은 해당지역의 農民市場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자유수매)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국가가 수매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국가는 수매한 농산물을 국가상점을 통

해 주민들에게 판매하는데, 이때 가격은 노동자, 사무원 등의 임금수준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같은 북한의 상품생산과 유통체계의 예외로 個人副業經理와 農民市場이 있다. 주민들의 개인부업 생산물이나 주택에 딸린 텃밭 등에서 생산된 물건들은 농민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농민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품목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거래량도 극히 적다.

所得의 分配와 處分

북한에서 생산부문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1次分配와 再分配를 통해 비생산부문을 포함한 각 경제주체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消費財의 購入資金으로 쓰이고 일부는 投資財源으로 활용된다.

북한에서 1차분배는 생산부문과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즉, 1次分配를 통해 소득의 일부는 생산부문의 기업소, 협동조합 등의 利潤과 그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賃金으로 분배되며, 일부는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사회보험공제금, 협동조합 소득세 등의 형태로 國家의 수중에 들어가 中央集中的 國家純所得이 된다.

1차분배로 형성된 시초소득은 再分配를 통해 그 일부가 非生産部門과 그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넘어가 최종소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주로 國家豫算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분배된 소득은 蓄積과 消費로 처분된다. 즉, 소득의 일부는 국가예산과 기업소 유보이윤, 주민들의 저축형태로 축적되어 생산의 확대와 개선, 주택·문화후생시설의 건설 등에 투자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비재 구입이나 문화적 욕구 충족에 쓰이게 된다. 여기서 축적과 투자는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업소 유보이윤이나 주민저축에 의해 투자되는 규모는 극히 작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분배와 처분의 특징은 자본주의 경제의 경우 소비와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國家가 介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해 북한의 경우에는 蓄積이 소비에 優先하고 그 과정이 國家計劃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外國과의 去來

북한에서 대외경제부문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獨占에 기초해서 計劃에 의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각 부문별로 전문화되고 독점적인 수출입상사와 대외거래의 결제를 전담하는 특수은행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일부 서방국가와의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외거래는 매년 체결되는 貿易協定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무역거래의 決濟는 쌍무청산에 의한 상호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방과의 거래는 현금결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때 換率은 소련의 루블화를 기준통화로 해서 평가된 상업환율이 사용된다.

對外信用증 차입은 대부분 수입 중 결제되지 않은 부분의 연불수입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용제공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외교적 목표달성을 위해 일부 아프리카, 중동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84년 9월 8일 서방선진국을 대상으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合營法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에서 북한은 자본, 기술 문건, 경영기법 등 합작투자분의 과실송금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합영법을 통한 합작투자는 제일조총련계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10여건 정도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규모가 작고 경영부실로 과실송금이 안되고 있거나 아예 합작이 중단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소련의 시베리아지방과 중동지역 국가에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그 댓가로 생산품의 일부를 현물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의 特徵은 域內經濟와 대외부문간의 연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자립적인 경제체제 구축을 정책기조로 삼고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대외부문을 국내경제의 補完的인 수단으로 취급해 왔기 때문이다.

測定 方法

북한의 사회총생산은 동일기업소에서 자체 소비한 것을 제외한 모든 생산품을 집계함으로써 구해진다. 예를들어 협동농장에서 밀 10을 생산, 이중 2를 자체소비하고, 밀가루공장에서는 밀 8을 원료로 해서 20의 밀가루를 생산, 이중 5를 자체소비하고, 빵공장에서는 밀가루 15를 원료로 해서 30의 빵을 생산, 이중 10을 자체소비했다면 사회총생산은 $\langle(10-2) + (20-5) + (30-10)\rangle$ 인 43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GNP는 $37 \langle = 10 + (20-8) + (30-15)\rangle$ 이 된다.

이와같이 북한의 사회총생산은 다른 제품생산에 투입된 중간재까지 집계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의 총산출 개념과 유사하다.

社會總生産의 세가지 價値形態

북한은 사회총생산을 가치측면에서 보아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활동의 성과를 세가지 가치형태로 구분하는 것은 노동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결국 여기서 발생된 소득의 관리, 처분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 해주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사회총생산의 세가지 가치형태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社會總生産} = C + V + m$$

이 식은 다름아닌 마르크스의 再生産表式이다. 여기서 C는 고정자본소모분에다 중간투입비를 더한 것, V는 자기를 위한 노동의 댓가로서 노동자의 賃金, m은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해 창조된 가치로서 사회순소득을 말한다.

社會純所得과 그 處分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학은 잉여가치 (m)가 어떻게 처분되는가에 이론전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잉여가치가 기업의 이윤으로서 자본가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社會純所得이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사회순소득을 다시 企業所純所得과 中央集中的 國家純所得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기업순소득은 기업소 또는 협동조합 차원에서 생산의 확대·개선과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후생복지비로 사용되고, 중앙집중적 국가순소득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보험료, 소득세 등으로 국가에 납부되어 전사회적 차원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國民所得 (NI)

國民所得의 概念

북한의 경제사전은 國民所得을 “사회총생산(총사회생산물)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사회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충당금과 중간투입비 (C)를 뺀 부분 ($V+m$)이 국민소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은 마르크스경제학의 價値論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생산물의 가치가 투입노동의 가치에 의해서만 발생된다고 보고, 다른 생산요소의 가치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시 노동을 노동수단과 그 대상 즉, 기계, 건물, 설비, 원료 등에 체화되어 있는 “과거노동”과 생산과정에 새로이 투입된 “산노동”으로 구분하고,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인 국민소득의 크기는 “산노동”부분의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測定 方法

북한은 국민소득의 측정방법을 生産的 方法과 分配的 方法으로 나누고, 다시 분배적 방법을 始初所得總和法, 最終所得總和法, 蓄積・消費所得總和法으로 세분하고 있다. 여기서 시초소득총화법과 최종소득총화법이란 각각 국민소득의 1차분배와 재분배과정중 어느 단계를 측정대상으로 하는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축적 및 소비품총화법은 국민소득을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국민소득 측정방법도 그 기본원리는 자본주의경제학이 생산, 분배, 지출 세가지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다.

經常價格과 不變價格

북한도 국민소득을 경상가격과 불변가격 두가지로 측정하고 있다. 경제사건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1948년 가격, 1957년 4월 1일 가격, 1962년 1월 1일 가격, 1971년 1월 1일 가격을 불변가격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불변가격 기준시점은 바로 계획기관에 의한 가격조정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GNP의 경우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기준시점을 이동하는 것과 다르다.

북한에서 物價는 국내의 변동요인은 물론 원유가인상 등 국제적 변동요인과의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이어서라기 보다는 물가가 당국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計劃價格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변동요인이 누적되어 이를 가격체계에 공식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때마다 북한은 가격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공식적인 가격조정은 아니더라도 물가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동일년도에 대한 국가예산과 결산발표에서 나타난 차이의 상당부분을 물가인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물가변동이 북한의 국민소득추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북한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통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과 북한의 국민소득개념에 비취볼 때, 북한이 지금까지 간혹 대외적으로 발표해 온 1인당국민소득은 經常價格으로, 예결산이나 경제계획 발표에서 나타난 국민소득성장률은 不變價格으로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國內(Domestic)概念의 國民所得

한편 북한의 국민소득개념이 國民(National) 개념인가, 國內(Domestic) 개념인가에 대해서도 북한의 문헌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북한의 대외경제관과 생산개념 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자립적인 경제체제 구축을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은 수출입 균형과 외국자본 배제를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바로 국내생산력의 척도라고 보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다. 이같은 북한의 대외경제관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은 國內概念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북한의 국민소득 측정에 있어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북한의 경제순환구조에서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재분배를 통해 최종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국민소득 추계방법중에서 최종소득총화법으로 측정된 국민소득은 국민개념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이 기본적으로 물질 생산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비생산부문의 소득을 포함한 최종소득이라는 것은 실제 국민소득 측정에서 독자성을 갖지 못하는 이론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국민소득 측정방법중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적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 특히 발표된 수치를 국내 개념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

라. GNP 와의 差異點 및 調整問題

(1) GNP 와의 差異點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서방과 북한의 국민소득개념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NP 對 GSP

國民總生産(GNP)과 社會總生産(GSP)의 차이는 첫째, GNP 측정에는 生産部門과 非生産部門이 다 포함되나 GSP 측정에는 비생산부문이 제외된다는 점, 둘째, GNP는 총산출에서 中間投入費를 뺀 부가가치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대해 GSP는 동일기업소내에서 자체 소비된 것을 제외한 중간투입비까지 그 집계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國民所得(NI)

북한의 국민소득(NI)은 GSP와 마찬가지로 비생산부문이 제외된다는 점 외에 간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去來收入金이 그 측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자본주의경제의 협의의 국민소득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다. 바꿔말하면 서방의 협의의 국민소득은 要素價格으로 계산된 것인데 대해 북한의 국민소득은 실제 去來價格으로 측정된 것이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

非生産部門, 去來收入金, 補助金

서방과 북한의 국민소득개념간의 차이점은 비생산부문과 거래수입금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조정하면 바로 서로의 국민소득개념이 같아진다는 것은 아니다. 개념상의 차이 외에 그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생

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국민소득 추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생산부문의 크기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주로 소비재에 부과하고 있는 去來收入金의 性格을 간접세로 볼 것인가, 국가 또는 기업의 이윤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은 거래수입금을 간접세가 아닌 사회순소득의 일부, 즉 국가이윤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조세가 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미밖에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수입금이 생기게 된 배경이 물품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소가 국가에 납부하고 있지만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수입금은 국가의 이윤보다는 간접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세째, 거래수입금을 간접세로 보면 북한경제에서 補助金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방의 협의의 국민소득을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를 빼고 보조금을 더해 구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거래수입금을 간접세로 보는 경우에는 보조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북한에서도 계획당국이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농작물과 일부 공업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업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처럼 경제투자의 대부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범위나 그 규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의미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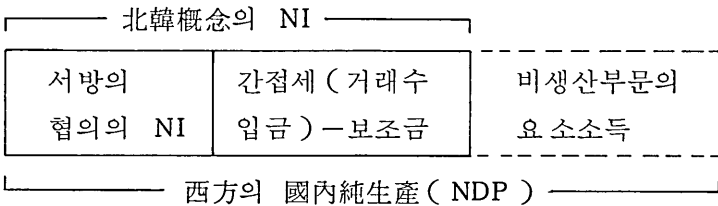
(2) 國民所得 概念間的 調整

그렇다면 서방과 북한의 국민소득개념은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인가. 두 개념사이의 가장 문제가 되는 비생산부문과 거래수입금, 보조금 등은 북한의 문헌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그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규모 파악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개념간의 조정없이 북한의 GNP 추계를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또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두 개념간의 조정은 가급적 애매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두 개념간의 관계를 산식으로 나타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개념상에 나타난 차이점만을 가지고 서방과 북한의 국민소득개념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국민소득 (NI) 을 토대로 GNP 를 추계하는데는 파악이 어려운 순간접세 (간접세 - 보조금) 부문을 고려하는 것보다, 바로 북한개념의 NI 에다가 비생산부문을 더한 것을 서방의 NDP 라고 보는 것이 개념조정의 어려움을 약간이나마 줄여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개념의 국민소득과 GNP 의 관계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北韓概念의 國民所得} + \text{非生産部門} = \text{國內純生産 (NDP)}$$

$$\text{NDP} + \text{海外純受取要素所得} = \text{國民純生産 (NNP)}$$

$$\text{NNP} + \text{固定資本消耗充當金} = \text{國民總生産 (GNP)}$$

그러나 위 식을 기초로 북한의 GNP를 추계하는 경우에도 비생산부문, 고정자본소모충당금, 해외부문을 어느정도 규모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남게 된다. 이와같은 문제점 때문에 실제 북한의 GNP 추계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GNP 추계에서 이미 검증된 수치를 이용하거나,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국민소득 할인율(사회주의경제의 NI/GNP)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⁹⁾

4. 北韓의 GNP推計方法

지금까지 北韓의 GNP를 추계, 발표해 온 대표적인 국내의 기관으로는 국내의 國土統一院을 비롯 미국의 中央情報局(U. 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USCIA)과 軍備管理軍縮局(U. 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 ACDA), 영국의 國際戰略問題研究所(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ategic Studies : IISS), 스웨덴의 스톡홀름國際平和研究所(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SIPRI)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UN통계국 등에서도 북한 GNP를 발표했으나 최근에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일본의 아세아경제연구소 등에서는 북한발표치 또는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를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에서 발표한 것 외에, 국내 일부학자나 관계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북한의 GNP 추계가 몇차례 시도된 바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봉석(1972, 뉴욕주립대), 최주환(1978, 당시 한국은행), 김영규(1980, 국토통일원), 이 풍(1981, 당시 국제경제연구원), 연하청·이봉석(1984, KDI)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¹⁰⁾

여기에서는 기존의 북한 GNP 추계방법 중, 꾸준히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있거나 그 결과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그 추계방법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推計結果 比較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의 GNP 추계결과는 각 기관마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토통일원의 추계치가 북한

의 GNP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CIA 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 표 - 1 > 北韓의 GNP 推計結果 比較(I)

(단위 : 億美 \$)

년도	국토통일원 ¹	미국CIA ²	ACDA ³	SIPRI ⁴	IISS ⁵
1960	15.2	48			
1965	23.4	76			
1970	39.8	100			85.1
1975	93.5	160	148.8		79.8
1980	135.5	195	180.5	143.3	133.7
1981	135.6	214	198.1	145.8	163.1
1982	136.2	222	205.0	153.1	156.1
1983	144.7	224	207.2	160.0	175.7
1984	147.7	230		195.8	187.4 (399.7)
1985	151.4			201.6	192.4 (424.5)
1986	173.5			206.1	

出處 및 註 :

- 1) 국토통일원, 남북한경제현황비교, 각년도판, 명목GNP.
- 2)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5. 1984년 가격기준 미\$ 환산 실질GNP.
- 3) 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85. 1982년 가격기준 미\$ 환산 실질GNP.
- 4) SIPRI, SIPRI Yearbook 1987; World Armament & Disarmament. 1980년 미\$ 환산 명목GNP. 군사비, 군사비/GNP 이용 계산.
- 5)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7-88. SIPRI와 동일 ; ()안은 같은 책 p.162, 1984년 북한 공식환율(1 \$: 0.94 북한원) 기준환산.

〈표-2〉는 1980-84년간의 북한GNP추계치를 국토통일원 추계치를 기준(100)으로 한 지수로 나타내 본 것이다. 이 기간중 미국CIA와 ACDA의 추계치는 대부분 국토통일원 추계치보다 1.4-1.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SIPRI와 IISS의 추계치도 1984년의 경우에는 1.3배 정도 국토통일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 기관의 추계치간에도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미국 CIA와 ACDA, SIPRI와 IISS의 추계치는 각각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1.2-1.5배 정도 높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각 기관에서 사용한 추계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발표된 액면만을 비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기관의 추계치가 명목GNP인지 실질GNP인지 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추계방법을 고려해서 조정하면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여기서 〈표-2〉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 본 것은 대개의 경우 북한의 GNP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각 기관에서 사용한 추계방법이나 환율, 자료출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기관이 높게 평가했다던가 낮게 평가했다던가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표 - 2〉

北韓의 GNP 推計結果 比較 (Ⅲ)

(국토통일원 : 100)

년 도	국토통일원	미국CIA	ACDA	SIPRI	IISS
1980	100	144	133	106	99
1981	100	158	146	108	120
1982	100	163	151	112	115
1983	100	155	143	111	121
1984	100	156	-	133	127

出處 : 〈표-1〉과 동일.

그런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각 기관에서 북한의 GNP만 발표할 뿐 어떻게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각 기관에서는 어떤 추계방법을 사용해서 북한의 GNP를 추계하고 있기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각 기관의 추계결과를 통해서 그 방법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

나. 推計方法 比較

(1) 國土統一院의 推計方法

국토통일원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GNP 추계를 어느 한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 북한경제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법에 의해 북한개념의 국민소득을 추계한 다음, 이를 토대로 북한과 서방의 국민소득개념 차이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북한의 GNP를 추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토통일원이 북한개념의 국민소득 추계에 사용한 세가지 방법은 첫째, 북한이 지금까지 발표한 국민소득 수치를 근거로 추계하는 방법¹¹⁾ 둘째, 북한의 국민소득 발표치를 일단 무시하고 분배면에서 북한이 말하는 시초소득총화법을 이용, 추계하는 방법

세째, 소련과학아카데미가 발간하는 “현대코리아”(1971년)에 발표된 1969년까지의 북한의 국민소득추계치를 토대로 추계하는 방법 등이다.

국토통일원은 이상과 같은 세가지 방법으로 추계한 북한개념의 국민소득중 북한이 발표한 예산증가율, 각 부문별 성장율 등과 비교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북한의 국민소득 추계치로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개념조정을 거쳐 서방 개념의 GNP를 추계하고 있다.

北韓概念의 國民所得+非生産部門의 要素所得=國民純生産(NNP)
 NNP + 固定資本消耗充當金=國民總生産(GNP)

국토통일원은 위 식에서 비생산부문의 요소소득은 대략 GNP의 6.8%, 고정자본소모충당금은 GNP의 3.7%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국토통일원은 북한개념의 국민소득이 GNP의 89.5%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위 식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해외소득부문이 빠져 있다. 그러나 이는 국토통일원이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을 國民(National)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국토통일원은 북한의 경우 수출입을 제외한 해외와의 거래가 극히 적고, 그나마 거의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차액만을 북한개념의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 域內所得에 반영시키고 있다.

한편 국토통일원은 이와같이 구해진 북한의 GNP를 기초로 해서 매년 經常價格에 의한 북한의 GNP를 추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북한이 발표한 국민소득성장율, 공업생산지수, 예산증가율, 각 부문별 생산증가율 등을 상호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¹²⁾

그리고 국토통일원은 美달러貨로 표시된 북한의 경상GNP도 산출하고 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국토통일원의 북한 GNP 추계치는 바로 이 미달러화 표시 GNP이다. 국토통일원은 미달러화 표시 북한 GNP를 산출하는데 있어, 과거에는 북한이 공식환율만을 발표했기 때문에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서방국가에서 평가한 무역환율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북한이 상업환율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간평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상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통일원의 북한 GNP 추계방법의 特徵은 북한의 발표치에 기초하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여러가지 자료와의 상호 검증을 통해서 북한의 GNP를 추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국토통일원의 북한 GNP 추계결과는 다른 기관의

추계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국토통일원은 북한의 GNP에서 非生産部門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추계방법 보다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국토통일원은 북한의 경우 비생산부문이 GNP의 6.8%, 국민소득의 7.6%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비해 다른 추계방법에서는 국민소득의 10% 내외로 보고 있어 이 비율의 차이만큼 국토통일원의 추계치는 다른 추계치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국토통일원에서 북한의 비생산부문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서 비생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작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의 구분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모호하며 또한 비생산부문 중 상당부문이 기업의 비용 등으로 생산부문에 포함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換率適用方法도 국토통일원의 추계치가 다른 기관의 추계치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통일원은 북한의 GNP를 미달러화로 표시하기 위해 매년 그해의 경상가격 표시 상업환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다른 기관에서는 특정시점의 상업환율 내지는 공식환율을 사용하고 있어 GNP추계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CIA와 같이 물가지수(GNP Deflator)로 조정한 특정시점 가격기준 환율을 적용하거나, IISS 처럼 공식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같은 환율적용방법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외국기관의 추계방법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밖에 재정규모/GNP 비율, GNP 성장을 추정 등도 국토통일원의 북한 GNP 추계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통일원은 이 비율들을 북한의 발표치가 과장되어 있으며, 경제의 중앙집중도 면에서도 다른 사회주의국가보다 높다는 시각에 입각, 자체 추계하고 있는데 대해서 외국기관에서는 북한발표치나 동구제국등에 적용되는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美國中央情報局 (USCIA)의 推計方法

외국기관중에서 북한경제에 관한 통계수치를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발표하고 있는 곳으로는 미국 CIA를 들 수 있다. 이곳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는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국가의 경제통계를 수록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GNP, 인구, 공업생산지수, 농업생산지수 등 30여개 항목에 걸쳐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통계수치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통계자료는 미국 CIA에 대한 신뢰도에 힘입어 많은 다른 자료에 인용되고 있다.

미국 CIA는 이 책의 통계자료 수록에 있어 각국의 공식發表値를 引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발표되지 않은 연도나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추계치 또는 조정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CIA는 사회주의국가의 국민소득을 GNP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자체 추계보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에 대해 미국 CIA와 추계방법이 같다고 볼 수 있는 ACDA는 개략적인 방법에 의해 추계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개략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국민소득 할인율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1980년도 이전 북한의 실질GNP 성장율은 북한이 발표한 국민소득 성장율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CIA는 북한의 발표치에 의존해서 GNP의 시계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책은 각국의 GNP를 가장 최근년도 가격기준의 美달러貨表示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준년도 환율을 미국과 해당나라의 물가지수(GNP deflator)로 조정한 환율이 사용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같은 환율적용방법은 미국 CIA의 북한 GNP추계치가 다른 기관의 추

계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물가상승율면에서 미국이 북한보다 높으며, 최근 미달러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상대적으로 북한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높게 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연도를 거슬러 올라 갈수록 심해져서 다른 기관 추계치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표-1〉참조).¹³⁾ 또한 같은 이유로 미국 CIA의 북한 GNP 추계치는 매년 발표할 때마다 다른 변동없이도 조금씩 높아지게 된다. 〈표-1〉에서 1984년도 가격기준인 미국 CIA의 추계치가 1982년도 가격기준인 ACDA추계치보다 13~16억달러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7년판에는 그동안 중공, 유고의 GNP와 함께 실어 오던 북한의 GNP가 빠져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CIA는 북한을 빼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GNP 추계가 곤란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북한은 그동안 발표해 오던 국민소득성장율등 일부 통계수치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국의 공식발표에 의존하는 미국 CIA로서는 북한의 GNP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상 미국 CIA의 북한 GNP추계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위 설명은 추계 결과만 가지고 유추해 본 것이므로 실제 추계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CIA는 북한의 발표치에 기초해서 북한의 실질GNP를 추계하고 있으며, 특히 환율적용방법 때문에 그 추계결과가 다른 기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3) 스톡홀름國際平和研究所(SIPRI)의 推計方法

SIPRI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평화, 군축 관계 연구소로 관계 학자들과 몇몇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군사력과 군축문제를 다룬 『SIPRY Yearbook : World

Armament & Disarmamen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책에서 SIPRI는 북한의 GNP 추계치를 직접 발표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의 軍事費와 軍事費 / GNP 比率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SIPRI의 북한 GNP 추계치를 계산해 낼 수 있다. <표-1>의 SIPRI 추계치는 이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것이다.

발표치를 통해서 볼 때, SIPRI는 북한이 예결산보고에서 발표하는 군사비를 북한의 실제 군사비지출로 보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군사비 / GNP 비율은 GNP를 따로 추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에서 국가예산 / GNP 비율이 65% 내외라는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단순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군사비가 국가예산의 14-16%를 차지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므로 위 가정을 적용하면 북한의 군사비는 GNP의 9-10%가 된다.

한편 SIPRI는 북한의 군사비를 미달러화로 환산하는데 1980년도 북한원화의 對달러 商業換率인 1\$: 1.79 북한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도 북한원화의 대달러환율은 1960년도 이후 대달러환율중 북한원화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시점의 북한원화 대달러환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의 군사비 내지 GNP는 높게 추계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SIPRI의 발표치에 나타난 북한 GNP 추계방법의 特徵은 첫째, 군사비, 군사비 / 재정규모 등 북한의 발표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둘째, 재정규모 / GNP 비율을 65%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 셋째, 1980년도의 상업환율을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4) 英國 國際戰略問題研究所 (IISS)의 推計方法

IISS는 매년 『The Military Balance』를 통해 북한의 GDP는 물

은 軍事費, 軍事費 / GDP 比率 등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내용을 통해 볼 때 I ISS는 SIPRI와 마찬가지로 군사비, 군사비 / 재정규모에 대한 북한의 발표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사비 / GDP 비율을 구하는 방법도 SIPRI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 ISS는 같은 책의 다른 곳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공식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GDP를 함께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비, 군사비/GDP로 구해지는 북한GDP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즉, I ISS는 각국별 군사력 현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1984년도의 공식환율인 1\$: 0.94 북한원을 사용, 북한의 GDP를 1984년과 1985년에 각각 399.7억\$, 424.5억\$로 추계하고 있으나, 뒤의 시계열표에서는 1\$: 2.05 북한원으로 평가된 1980년도 상업환율을 사용, 같은 기간의 북한 GDP를 187.4억\$, 192.4억\$로 평가하고 있다.

I ISS의 『The Military Balance』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해 놓은 자료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권위있는 책자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책의 북한 GNP 추계치는 발표되자마자 세계 각국의 언론을 통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언론사에서는 환율적용에 대한 설명없이 공식환율로 환산된 북한GDP만을 보도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북한경제에 대해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I ISS가 1980년도 북한의 상업환율을 1\$: 2.05 북한원으로 본 것도 다른 기관과 많은 차이가 난다(〈표-3〉참조). 즉, I ISS는 1980년도 미달러화에 대한 북한원화의 가치를 다른 기관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어, 그만큼 북한의 GNP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추계방법을 사용한 SIPRI와 I ISS의 북한 GNP 추계치중 SIPRI 쪽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I ISS의 북한 GNP 추계방법은 일단 SIPRI의 추계방법과 같다고 볼 수 있으나, 환율적용방법에 있어 북한의 상업환율

과 공식환율을 둘 다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표 - 3〉 各 機關別 1980年度 北韓원貨의 對달러換率

(단위 : 美1 \$當 북한원)

국토통일원	USCIA	SIPRI	I ISS
1.79	1.77	1.79	2.05

出處 : 〈표-1〉과 동일

다. 北韓의 GNP推計에 따르는 問題點

이상 북한의 GNP를 추계, 발표하고 있는 국내외 여러 기관중 대표적인 네 기관의 북한 GNP 추계방법과 그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국토통일원을 제외한 외국기관의 경우 위 설명은 추계결과를 통해 유추해 본 것이므로 실제 추계방법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추계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각 추계방법을 비교해 봄으로써 북한의 GNP 추계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換率適用方法

각 기관의 북한 GNP 추계치는 미달러화 표시로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換率適用方法이 각 추계기관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액면만을 놓고 볼 때, 각 기관의 북한 GNP 추계치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I ISS처럼 공식환율을 사용하는 경우 추계결과는 다른 추계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換率이란 두 나라 화폐간의 교환비율 즉, 화폐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수지와 물가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간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영향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

용하게 된다.¹⁴⁾ 그러나 현재 국제통계처리 수준은 만족할만한 환율적용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실의 환시세를 설명하는데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환율적용방법은 각 기관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북한경제 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해, 북한의 GNP 규모를 같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환율적용방법이 다르면 액면의 추계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업환율과 공식환율중 어느 것이 북한원화의 대달러환율로 적합하다고 보느냐 하는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상업환율을 사용한 경우와 공식환율을 사용한 경우의 차이는 두배 이상 나고 있는데, 이같은 차이는 단순한 환율적용방법상의 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환율제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공식환율이 그들의 화폐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환율을 사용한 IISS의 북한GNP 추계치를 북한의 인구로 나누면 1인당 GNP가 2,000\$이 넘는데, 이는 북한과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중공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물가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같은 수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非生産部門 / GNP

각 기관의 북한 GNP 추계방법은 非生産部門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통일원은 이 비율을 6.8%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추계방법보다 2-3% 정도 낮은 것이다.

이같은 차이는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과 경제순환구조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거론되고 있는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에서의 물적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의 구분이 현실 경제에서는 모호하다는 점

둘째, 기업에서 비생산부문에 지출된 비용이 생산부문의 원가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셋째, 물적 생산부문을 강조하는 북한의 경우 생산부문의 가격은 비생산 부문에 비해 높게 결정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비생산부문 / GNP 비율의 차이는 이같은 점들을 북한의 GNP 추계에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대체로 비생산부문 / GNP 비율을 높게 보는 것은 소련, 동구 등의 GNP 추계에서 사용된 수치를 북한의 경우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추계방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국토통일원은 북한의 발표치 자체가 남쪽의 경제성장을 의식한 다분히 선전용의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의 GNP 는 그만큼 과대평가된다고 보고 있다.

軍事費, 軍事費 / 財政規模, 財政規模 / GNP

각 기관의 북한 GNP 추계방법은 軍事費, 軍事費 / 財政規模, 軍事費 / GNP, 財政規模 / GNP 등의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에 있어 차이가 나고 있다. 국토통일원과 ACDA 는 북한의 실제 군사비가 공식발표치보다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 국토통일원은 북한의 재정규모 / GNP 비율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으나, SIPRI 와 IISS는 북한발표 군사비를 실제 군사비로 받아 들이면서 재정규모 / GNP 비율도 비교적 낮게 보고 있다(〈표 - 4〉 참조).

이것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북한의 국민소득개념 내지 경제순환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발표하는 군사비를 그들의 실제 군사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표 - 4〉 各 機關別 軍事費 / GNP, 財政規模 / GNP 推定
(단위 : %)

기 관 별		1980	1981	1982	1983	1984
국토통일원	군사비 / GNP	22.5	22.5	22.5	23.5	23.5
	재정규모 / GNP	77.5	77.2	76.9	76.2	75.3
ACDA	군사비 / GNP	19.4	17.4	17.1	16.7	-
	재정규모 / GNP	71.1	-	57.5	-	-
SIPRI	군사비 / GNP	10.7	11.5	11.8	12.3	-
	재정규모 / GNP	64.0	58.8	58.0	54.9	-
IISS	군사비 / GDP	10.0	9.0	10.0	10.0	10.0
	재정규모 / GDP	68.5	75.1	68.5	67.6	68.5

出處 : 〈표 - 1〉과 동일

이 점에 대해 國土統一院은 1960년대부터의 군사비 / 재정규모 추이나 다른 경로로 파악된 북한의 현재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공식발표 군사비는 실제 군사비의 일부만을 드러낸 것이며, 재정규모 / GNP 비율도 중앙집중도가 높은 북한의 경우 다른 사회주의국가보다는 높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통일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사비를 자체 추계하고 있는 ACDA도 북한의 실제군사비가 국가예산의 다른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SIPRI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각국이 발표한 군사비를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에도 공식 발표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동구제국에 대해 통용되는 재정규모 / GNP 비율을 사용해서 군사비 / GNP 비율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時系列 推定上의 問題

북한의 1인당국민소득 발표치를 이용해서 북한의 GNP를 추계하는 방법은 대부분 1967년 제4기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金日成이 발표한 1966년 1인당 국민소득 500 북한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토대로 시계열 추정을 하는 경우 초기년도의 GNP 추계치에서 나타난 차이가 계속 누적되어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표-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기년도 북한의 GNP를 100과 130으로 다르게 추계했다면, GNP 성장율을 5%로 같게 적용하더라도, 그 격차는 처음의 30에서 5년후에는 39, 20년후에는 80으로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같은 時系列 推定上의 問題點도 추계방법마다 북한의 GNP가 다르게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표 - 5 > GNP 時系列 推定 例

(년평균 성장률 5%적용)

구 분	초기년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A	100	127	163	265
B	130	166	212	345
B - A	30	39	49	80

지금까지 국내외 각 기관의 북한 GNP 추계방법을 비교하면서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은 신빙성 있는 경제통계자료를 거의 발표하지 않는 北韓의 閉鎖性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최근 소련, 동구 및 중공 등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지금까지 발표해 오던 통계수치마저 감추고 있어 폐쇄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5. 맺는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西方은 경제총량지표로서 GNP를 사용하고 있으며, 北韓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물적생산개념에 입각한 사회 총생산(GSP)과 국민소득(NI)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순환구조가 다른 만큼 서로의 경제총량지표의 개념도 다르다. 따라서 GNP를 이용해서 한해동안 북한의 경제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국민소득 개념간 차이가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이 극도의 폐쇄성을 보이며 그동안 몇차례 1인당국민소득을 발표하였을뿐 그 내역이라든지 그밖에 GNP추계에 이용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 까닭에 국내외 여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북한의 GNP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계되어 왔으나 그 결과는 크게 차이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이 다양한 북한의 GNP추계방법이나 결과 중에서 어느 것이 북한 경제현실을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냐 하는 점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사회과학의 접근방법이 그러하거니와 북한의 GNP 추계방법과 그 결과의 妥當性 문제도 북한의 GNP를 추계하는 목적과 관련시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북한의 GNP를 추계하는 目的은 대략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의 GNP추계를 통해 북한경제의 산업구조, 경제정책, 관리체계등 巨視的인 變化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발발 가능성과 관련, GNP 추계결과를 통해 북한의 經濟自立度, 軍事費 負擔能力 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세째, 남북한간의 체제경쟁 차원에서 GNP내지는 1인당 GNP 비교를

통해 서로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長短點을 比較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GNP추계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추계과정에서 위에서 제기한 각 요소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GNP 추계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북한경제의 순환구조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냐 하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단지 북한이 발표한 1인당국민소득이나 군사비 등에만 의존해서 북한의 GNP를 추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남북한 경제력 비교에도 적절치 못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GNP추계에 있어서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경제 현실에 보다 접근된 결과를 측정해 내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동구나 중공처럼 그들 경제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그들의 폐쇄정책을 바꿔 신빙성있는 통계자료를 공개한다는 것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GNP추계작업은 다음과 같은 부분적인 보완을 할 때, 좀 더 추계목적에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GNP 추계에 보다 많은 關係 專門家들이 參與하도록 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대한 서로 다른 視角을 종합함은 물론 추계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 그 객관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각계에서 일고 있는 통일논의에 대한 열의와 북한에 대한 관심은 북한 경제 연구 내지 GNP추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일각에는 북한을 계급적 내지는 그 실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것은 건전한 북한연구를 해칠 수도 있는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북한의 GNP추계는 북한경제에 대한 各論的 分析과 연관되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북한경제 분석을 보면 GNP와 같은 거시적 분석과 각 부문별 분석과 같은 미시적 분석간의 연관성이 미흡했다.

북한의 임금, 가격체계, 유통과정 등 경제관리체계는 물론 각 부문별

생산량과 같은 실물적인 분석이 함께 진전됨으로써, 북한의 GNP 추계도 그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GNP로 경제현실을 나타내는 데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따라서 GNP를 가지고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이같은 한계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남북한과 같이 경제체제가 대조적인 경우에 GNP가 나타내 줄 수 있는 경제비교의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북한경제 연구는 물론 남북한 경제력 비교는 量的인 접근과 함께 경제체제 및 주민생활 등에 대한 質的인 접근방법을 병행하는 쪽으로 그 연구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북한의 GNP추계치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발표된 수치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한편 GNP나 1인당 GNP가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력을 나타내 주는 전부가 아님을 염두해 두고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노력만이 북한이 그들의 폐쇄성을 점점 강화해 가는 현 상황에서 GNP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북한의 GNP추계에 따르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북한경제를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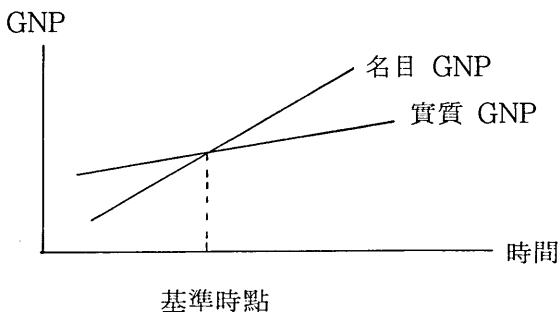
 註

- 1) 韓國銀行 調査第 2 部, 우리나라의 新國民計定, 1986. 2.
- 2) 都留重人 編, 經濟學小辭典, 東京: 岩波書店, 1981, p.103.
- 3) 이하 설명에서 ‘국가’ ‘국가계획’ ‘국가예산’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설명의 편의상 北韓의 文獻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데 불과한 것이다.
- 4) J.Wilczynski 는 計劃經濟體制를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 ① 官僚的 中央集權模型 (The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 ② 計量的 企劃方式의 中央集權模型 (The Planometric Centralist Model)
 - ③ 選別的 分權模型 (A Selectively Decentralized Model)
 - ④ 補完的 市場模型 (Supplement Market Model)

J.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Chicago: Aldine, 1973, pp.23 ~ 25. Wilczynski 는 北韓은 官僚的 中央集權模型에 해당한다고 분류하고 있다.
- 5) 金永圭, 北韓의 實質消費生活水準分析, 國土統一院, 1984, pp.148-197.
- 6)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34.
- 7)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216.
- 8) 石川滋, “中共의 國民所得概念과 推計方法,” 共產圈經濟, 제 2 권, 제 3 호, 1985.9, 서울: 産業研究院, pp.225-226.
- 9) 일반적으로 畵引率은 85 %로 추정되고 있다.
- 10) 지금까지 北韓의 GNP 推計에 대한 研究는 다음과 같다.
Pong S.Lee, “An Estimate of North Korea’s National Income.”

Asian Survey, Vol.12, No.6, June 1972; 崔周煥, “북한의 GNP 추정 - 지출면에서의 접근”, 통일정책 제 4 권, 제 1 호, 1978 ; 金永圭, “북한의 GNP 추계방법”, 통일정책, 제 6 권, 제 3,4 합권 호, 1980 ; 李豊, “북한의 GNP 추계방법”, 북한, 1981.12 ; 延河清·이봉석, “북한경제총량 추정에 관한 소고”, 한국개발연구, 제 6 권, 제 3 호, 1984 가을.

- 11) 지금까지 北韓이 발표한 1인당국민소득은 다음과 같다.
 1966년 500 북한원, 제 4기 1차 최고인민회의 (1967.12.16)
 1966년 510 북한원, 조선중앙연감 1966-1967년 합판
 1967년 580 북한원, 조선중앙방송 (1970.9.17)
 1974년 1,000 \$, 공업열성자대회 (1975.3.4)
 1979년 1,920 \$, 김일성신년사 (1980.1.1)
 1982년 2,200 \$, 김우중 대외문화연락협회부위원장 (1983.9.12)
 대부분의 北韓 GNP 推計는 1966년 500 북한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 12) 國土統一院은 金日成의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의 몇가지 테제” (1961.3.1)에 간접적으로 암시된 年間 國民所得成長率 6-7% 수준을 기준선으로 보고 있다.
- 13) 美國 CIA의 換率適用方法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현상은 實質 GNP와 名目 GNP 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음 그림참조)



參考資料

□ 南北韓 GNP 및 軍事費比較

經常價格

年 度	GNP(億美\$)		1인당 GNP(美\$)		軍事費(億美\$)		軍事費 / GNP(%)	
	韓國 ¹	北韓	韓國	北韓	韓國	北韓	韓國	北韓
1960	19	15	79	137	1.8	3.1	9.6	19.7
1961	21	18	82	163	1.1	3.7	5.2	20.2
1962	23	20	87	179	1.4	4.3	6.2	21.2
1963	27	21	100	185	1.5	4.9	5.7	22.9
1964	29	23	103	194	1.0	5.6	3.3	24.5
1965	30	23	105	192	1.1	6.1	3.7	25.9
1966	37	24	125	192	1.4	6.2	3.9	25.9
1967	43	26	142	202	1.7	6.4	3.9	24.5
1968	52	30	169	225	2.0	8.1	3.9	27.3
1969	66	31	210	230	2.6	8.3	3.9	26.6
1970	81	40	252	286	3.0	9.9	3.7	24.8
1971	95	41	288	308	4.0	10.3	4.2	25.3
1972	106	46	318	316	4.6	10.9	4.3	23.5
1973	134	63	395	418	4.6	12.0	3.4	19.2
1974	187	73	540	461	7.3	14.6	3.9	20.0
1975	208	94	590	579	9.2	20.2	4.4	21.6
1976	286	95	797	585	14.6	21.4	5.1	22.5
1977	366	106	1,008	642	19.8	21.7	5.4	20.4
1978	513	119	1,392	704	28.2	28.1	5.5	23.6
1979	614	125	1,640	720	31.3	29.3	5.1	23.5
1980	603	135	1,589	758	38.0	33.9	6.3	25.1
1981	662	136	1,719	746	39.1	32.4	5.9	23.9
1982	693	136	1,773	735	43.7	32.4	6.3	23.8
1983	760	145	1,914	765	43.3	34.0	5.7	23.5
1984	824	148	2,044	762	43.7	34.2	5.3	23.2
1985	837	151	2,047	765	43.5	35.0	5.2	23.1
1986	953	174	2,300	860	48.6	39.3	5.1	22.7

出處 및 註：韓國銀行，經濟企劃院，國土統一院。

¹ 韓國의 1970年以後系列은 新國民計定體系에 依함.

□ 南北韓主要經濟指標比較

'86 年末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¹
人口(年央人口)	萬 名	4,157	2,019
面 積	千 km ²	99.4	122.1
G N P	億 \$	953.4	173.5
1 人當 G N P	\$	2,300	860
經 濟 成 長 率	實 質 %	12.5	2.1
財 政 規 模	億 \$	156.5	127.3
軍 事 費 支 出	"	48.9	39.3
軍 事 費 / G N P	%	5.1	22.7
軍 事 費 累 計 額	億 \$	455.0	486.4
1 人當 軍 事 費	\$	118	195
總 兵 力 數	千 名	601	838
兵 力 / 人 口	%	1.45	4.15
貿 易 高	億 \$	662.9	36.0
輸 出	"	347.1	14.9
輸 入	"	315.8	21.1
外 債 ²	"	325.0	40.6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發 電 設 備 容 量	萬 kw	1,806	611
石 炭 生 產 量	萬 噸	2,425	3,750
精 油 生 產 能 力	萬bl/日	79.2	7
鋼 鐵 生 產 能 力	萬 噸	1,584	430
시멘트生產能力	〃	2,986	904
自 動 車 生 產 能 力	萬 臺	65	2
造 船 能 力	萬 G/T	300	21
T V 生 產 能 力	萬 臺	1,248	24
織 物 生 產 能 力	億 m^2	60	6.2
食糧作物生產量	萬 噸	677	483
(粿 生 產 量)	〃	(561)	(201)
水 產 物 生 產 量	〃	366	237
道 路 總 延 長	km	53,654	22,000
(高 速 道 路)	〃	(1,415)	(240)
鐵 道 總 延 長	〃	6,324	4,549
(電 鐵 區 間)	〃	(1,079)	(2,788)

出處 吳 註： 國土統一院，南北韓經濟現況比較，1987.

1 國土統一院 推定值

2 純外債

□ 國外主要機關別 南北韓 經濟指標 推計值

○ 미국 中央情報局 (USCIA)

• 남북한 실질 GNP 추계치

1984 가격기준 10億美\$

	1960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한국	13.7	18.7	30.7	48.7	67.9	72.4	76.5	83.5	90.1
북한	4.8	7.6	10.0	16.0	19.5	21.4	22.2	22.4	23.0

出處 :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5.

• 북한의 실질 GNP, 1인당 실질 GNP 성장을

%

	1961-65	1966-70	1971-75	1976-80	1981	1982	1983	1984
GNP	9.8	5.5	10.4	4.1	9.8	3.7	0.9	2.7
1인당GNP	6.6	2.7	7.3	3.7	6.2	1.7	-1.6	-

出處 : 上同

• 북한의 공업 및 농업생산지수

1970 = 10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공업생산지수	30	58	100	228	433	476	556	-	-
농업생산지수	-	90	100	154	131	180	191	183	189

出處 및 註 : 上同, 북한의 공식발표치.

○ 미국 軍備管理軍縮局 (ACDA)

구분 년도	GNP (1982 10억미\$)		군사비 (1982 10억미\$)		·군사비 / GNP (%)		군사비/재정규모 (%)	
	한 국	북 한 ¹	한 국	북 한 ¹	한 국	북 한	한 국	북 한
1973	38.5	11.3E	1.5	2.1	3.8	18.7	28.1	25.7
1974	41.5	12.7E	1.8	2.5	4.3	19.4	26.7	28.0
1975	44.3	14.9E	2.0	1.8	4.6	12.0	26.4	20.3
1976	50.6	15.5E	2.8	2.1	5.6	13.2	30.6	21.6
1977	57.0	16.4E	3.2	1.8	5.6	11.3	30.8	17.9
1978	62.5	17.1E	3.7	1.8	5.9	10.6	32.6	15.9
1979	66.6	18.3E	3.4	1.7	5.1	9.2	26.7	12.8
1980	63.1	18.1E	3.8	3.5 E	6.1	19.4	29.3	27.3
1981	67.1	19.8E	4.1	3.5 E	6.2	17.4	27.8	-
1982	70.8	20.5E	4.3	3.5 E	6.1	17.1	27.2	29.7
1983	77.4	20.7E	4.5	3.5 E	5.8	16.7	27.9	-

出處 및 註 : US 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85. E는 추계치
¹ E는 추계치

○ 스톡홀름 國際平和研究所 (SIPRI)

구분 \ 년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군사비 ¹	한국	2.4	2.9	3.6	3.4	3.7	3.8	4.0	4.2
	북한	1.1	1.2	1.3	1.4	1.5	1.7	1.8	2.0	2.1	(2.2)
군사비	한국 ²	5.5	5.6	6.0	5.1	6.0	6.0	6.0	5.7	5.1	-
%	북한	10.1	9.6	10.1	10.4	10.7	11.5	11.8	12.3	-	-

出處 및 註 : SIPRI, SIPRI Yearbook 1987

¹ 韓國은 不變價格基準 1980年 10億美\$: 北韓은 경상가격 기준 1980년 10億美\$. ()안은 不確實한 資料.

² 군사비 / GDP.

○ 英國 國際戰略問題研究所 (IISS)

구분 \ 년도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군사비 ¹	한국	0.3	0.8	1.3	3.3	3.7	4.8	4.2
	북한	-	0.9	0.9	1.3	1.5	1.6	1.8	1.9	1.9
군사비	한국	2.4	3.7	3.4	4.3	5.8	7.1	5.6	5.3	5.2
%	북한	-	11.0	11.0	10.0	9.0	10.0	10.0	10.0	10.0

出處 및 註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7-88.

¹ 경상가격 기준 1980年 10億美\$.

□ 北韓원貨 對美\$換率

美\$ 1 當 北韓원

	1971	1973	1975	1977	1978	1979
국토통일원 ¹	2.57	2.37	2.05	2.15	1.86	1.79
미국CIA ²	2.36	2.06	2.02	2.02	1.86	1.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79	1.94	2.12	2.18	2.36	2.43	2.23
1.77	1.85	2.00	-	-	-	-

出處 및 註 : ¹ 國土統一院 推定值.

²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5.
 년말기준 무역환율 ; 1978년 3월 특별환율 ;
 1981 ~ 82년 추정치.

북한 GNP推計方法 解説

1988年 6月 1日 印刷
1988年 6月 4日 發刊

發行處 國 土 統 一 院
電話 720-2426, 2143

印刷處 文 成 輕 印 機
